

2차 추경 조기집행 등 수단 총동원 ‘내수시장 활력’ 나선다

김민석 총리 첫 고위당정협의

가공식품값 인상 최소화 등 요청
집행관리 예산 85% 9월 내 집행
추경효과 즉시 체감되게 면밀점검

당정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치솟는 물가를 잡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조기 집행해 내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당정은 6일 오후 서울 삼성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문진석·허영원내수석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 겸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 첫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성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포함한 당정은 한몸이다. 당원 주권, 국민 주권의 철학을 공유하고 입법부, 행정부의 운영 책임 공유하고 내란 극복, 경제 회복, 성장 비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고위당정협의회는 국정 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 리더십 하에 성과 만드는 조율 공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치인 2%를 오르내리고 있고, 국제유가 변

동성·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당은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생 안정과 내수 시장 활력

을 위해 새 정부의 추경을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계획을 점검했다. 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 목표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

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됐다. 대통령께서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웅으신 말씀”이라며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소비진작과 소득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시 한번 신속한 집행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물가 대책이 시급하다. 먹거리 물가 때문에 국민의 근심이 늘고 있다”며 “수산, 축산물 물가 지수는 각각 올해 상반기 5.1%, 4.3% 올랐다”며 “올해 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 식품과 외식 물가도 3.7%, 3.1%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물가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1면 ‘정상회담·관세…’서 계속

품목별 관세에 車업계 ‘위기’… 반도체·조선·방산 ‘기회’

美 트럼프 ‘OBBBA’ 법안 통과

전기차 지원금 오는 9월30일 종료
연간 보조금 계산땀 9억 달러 달해
현지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 기업에
세액공제 25→35% 수익성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지난 3일(현지 시간) 미연방 의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으면서 쟁점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품목별 관세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조선 분야와는 다른 양상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BBBA에는 감세, 불법이민 차단 강화, 취약계층 복지·친환경 에너지 보조금 예산 삭감 등 트럼프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총망라됐다. 특히 대표적으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 구매시 지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현대차

원하던 대당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9월 30일 종료된다. 기존 법이 2032년 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7년 가까이 앞당겨진 셈이다. 중고 전기차 구매시 지원한 4000달러(약 540만원)의 혜택도 사라진다.

지난해 미국에서 약 12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현대자동차그룹은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12만대에 대한 보조금을 계산하면 총 9억 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초 발효한 자동차 품목별 관세(25%) 부담도 떠안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가격 동결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내 여유재고가 소진될 경우 실적 악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실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판매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고 관세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반면 반도체 업계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법에 근거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새로 구축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를 25%에서 35%로 확대했다.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안 법안에서의 3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또 미국 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사용한 지출은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과 방위산업 등은 수익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미국 시장 진출 접근성 확대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의 미국발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 국방 예산 증액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생산량 확대에 관세 저감 효과는 있지만 투자 대비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진 못할 것”이라며 “OBBBA 시행전까지 전기차 구매를 서두르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최대한 판매량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 관세협상 좋은영향 기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협의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 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워싱턴D.C.에서 만날 미국 측 협의 상대에 대한 질문에 “제 카운터파트(상대 직위자)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위 실장의 출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현재 정부 측에서 미국에 파견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유예 연장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 대화하면, 우리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실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되면, 이 역시 관세 협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 취재진에게 “(G7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면) 관세 문제 실무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G7·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루비오 장관의 방한 역시 중동 사태의 여파로 취소됐다.

/서예진 기자 syj@

이번주 상호관세 유예기한 끝나는데… 韓, 협상 지지부진

韓 비롯 전세계 유예시한 9일까지
협상타결 국가 英·베트남 2곳 뿐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여전히 불확실성의 영역에 빠져 있다. 이번 주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이 만료되지만 타결을 향한 진전은 더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전 세계에 유예 시한(7월9일)을 제시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6일(한국시간) 오후 기준 미국 측과 타결에 이른 곳은 영국과 베트남 2개국 뿐이다.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편으론 관세율을 일방통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도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존에 제시한 관세율이 아닌 변경된 수치의 관

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유예가 종료되는 미 동부시간 9일 0시 전후로 각국과 미국 간 개별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공개된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율이 주요국에 제시될 가능성도 제시된다. 일본의 경우, 트럼프는 당초 24%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협상에 불만을 드

러내며 관세율 35%를 거론한 바 있다. 한국에 제시된 안은 당초 25%이다.

수차례의 고위급 및 기술협상이 진행됐으나 여타 국가들에 비해 협상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 D.C.로 급파해 대응 중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8일까지 워싱턴에 머문 뒤 일주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은 상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